

<div data-bbox="204 288 571 376"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63 398 512 443" data-label="Text"> <p>2021. 12. 6.</p> </div>	<div data-bbox="651 257 761 35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25 268 1294 340" data-label="Section-Header"> <h2> 양형위원회 </h2> </div>
<div data-bbox="687 421 766 461" data-label="Text"> <p>문의</p> </div>	<div data-bbox="975 403 1289 481" data-label="Text"> <p>운영지원단장 송영복 (☎ 02-3480-1924)</p> </div>

양형위원회 12/6(월) 제113차 회의 결과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범위 심의

- 아동학대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향: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함.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
- 아동학대살해 범죄 권고 양형범위 설정: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심의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기본 원칙: 일률적, 획일적 설정이 아닌 범죄군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범죄군별 설정 방식'
-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필요 시 규범적 조정을 가함

3.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양형기준 수정안의 44개 범죄군 유형 분류를 그대로 유지함

-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함**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1. 12. 6. 15:3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권고 형량범위, ②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심의하고, ③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함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권고 형량범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하여 가중 영역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행 양형기준 중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2월 - 3년6월

- 행위 유형이나 아동의 성장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하고,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은 현행 유지
-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들(상해, 교통사고 치사상 등)의 가중 영역 상한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반영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게 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죄를 신규 설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적 학대	4월 - 1년 6월	8월 - 2년 6월	2년 - 5년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 6월 - 6년

- 성적 학대: ①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행위 태양도 언어적 학대부터 성적 접촉에 이르는 경우까지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 ② 각 영역의 상한은 **형량 강화 요청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19세 미만)’와 같이 정함**, ③ 가중 영역의 상한(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죄질의 행위 유형(가령, 강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요건(강간죄)으로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아동매매: ① 선고사례 중 범행동기 등을 보면 입양이 대부분이나 영리목적 알선인 경우도 있는 점, 아동매매 중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목적범인 인신매매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② 비록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으로 성적 학대와 동일하나, 성적 학대와 달리 벌금형이 없으므로 성적 학대의 형량범위 보다 상향하여 설정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는 선고 사건이 모두 현행 양형기준 내에 위치해 있고, 선고 사건(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 기준) 수가 10년간 11건에 불과하므로 양형 실무 축적 상황을 보기로 하고, 현행 양형기준 유지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8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하여 기본 영역 상한, 가중 영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상향(특히, 가중 영역 상한은 10년 → 15년으로 대폭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행 양형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양형기준 수정안	2년6월 - 5년	4년 - <u>8년</u>	<u>7년 - 15년</u>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임.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함
-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신규 설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 범위에 의한다.

-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
-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관련 향후 일정]

- 2022.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공개
- 2022. 1.~2022.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2022. 2.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22. 3.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 의결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심의(기본 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기본 원칙]

○ 기본 원칙 설정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수립해 두고, 이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함: 이는 제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 작업뿐만 아니라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임
- 범죄군 전체에 관한 일률적·통일적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형위원회 설립 후 14년간 이어온 양형기준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징역형 양형기준과 같이 개별적 양형기준을 선택함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벌금형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별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징역형 양형기준을 전제로 그 양형기준에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중 특정 영역에 형종 선택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 개개 범죄군별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징역형 양형기준에서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원칙과 동일하게, 양형 실무의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함
-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함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집행유예 기준 원칙: 양형 실무 축적 후 재논의

-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범의 위험성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종전 징역형 집행유예와 출발점이 다름
- 집행유예는 징역형 중 60% 이상 활용될 만큼 빈번하나, 벌금형에서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함

[위 원칙 정리]

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관련 향후 일정]

- 2022. 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적용 여부, 설정 대상 범죄군 등 심의 / 원칙안 확정 · 공개
- 2022. 1.~2022.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2022.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22. 3.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원칙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최종 의결

[3]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1. 10. 8.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범죄군 분류]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비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상세 설명

-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 비교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따라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범죄군 특성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② 그렇지 않은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각 반영. 한편,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①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하거나, ②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
-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로도 반영하지 않음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결정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 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 · 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 · 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 · 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 · 금 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 지 유형) / 사행성 · 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 · 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 경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

-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일부 범죄에만 들어가 있던 일반가중사유 또는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관련 요소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명칭을 통일하고, 그 정의 규정도 정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범죄(1-1, 1-2, 2-1, 2-2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

-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함

- 수정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의 정의 규정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 규정]

○ 처벌불원

- 정의 규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① 가해자 태도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② 피해자 의사 요소로서 양형심리를 통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을 요구함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정의 규정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은 따로 반영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칫

피고인의 경제력이 양형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비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처벌불원의 요건으로 둘 만한 논리적 정합성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자체가 「회복적 사법」의 핵심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종전 양형인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통합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핵심 요소로서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또는 그 확실시를 정하되, 종전 재산범죄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임
-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뇌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선거범죄,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의 특수성 감안하여 정의 규정 추가
 - 선거범죄: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

한다.”

- 명예훼손범죄: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다음 이유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②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설령 정의 규정을 두더라도, 추상적인 기준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해당 인자의 판단 기준은 결국 사회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이므로, 불완전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

-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각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함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역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함

[적용 시기]

- 2022. 3. 1. 수정 양형기준 시행

- 관보 게재 기간, 양형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간, 수정된 양형기준을 각종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 등을 고려
- 2022. 3. 1.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하여 적용

4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

- 일시 : 2022. 1. 24.(월) 오후
- 장소 및 방식: 대법원 회의실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안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수정안 의결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심의 및 원칙안 의결